

주요 정책 이슈

- 2013.12.6,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-

① (창조경제정책)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신산업 시장 활성화전략 발표

- (주요내용)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해 안전, 건강, 편리, 문화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부처간 협업전략 마련
 - (안전) u-안심생활 서비스*를 통합하고, 공공 사업추진체계 개편**을 통해 민간보급 촉진
 - * 국민안심서비스(안행부), 안심알리미서비스(교육부), 치매환자안심서비스(복지부) 등
 - ** (기존) 서비스모델 기획·설계·보급 → (변경) 서비스사양 제시, 저소득층 이용요금 지원 등
 - (건강) 공공기관 보유 유전체 자원의 소관부처 제출을 의무화하고 '21년까지 10만명의 한국인 유전체자원을 확보해 유전체기반 헬스케어 신산업 창출
 - (편리) 스마트플러그* 표준화기준을 조기정비하고 연계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**구축을 기반으로 스마트홈 에너지관리 서비스 확산
 - * 가전제품 미사용시 전원을 차단하고 소비전력 표시기능을 가진 탈부착 가능한 플러그
 - **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개발·공개로 민간의 다양한 전력수요관리 서비스창출 가능
 - (문화) 첨단융합콘텐츠 공동사업 협의회 구성('14.상), 첨단디지털 체험·공연장('20년까지 60개소) 조성 등을 통해 체험형 콘텐츠 비즈니스 창출 활성화
- (평가 및 과제) 앞선 ICT기술·인프라를 통해 융합신시장을 선점하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빅데이터 출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여전
 - 개인정보 보호범위와 빅데이터 기술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(중앙일보)

② (복지정책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사업 선정·관리 확대

- (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) 사회보장정보시스템*에 보훈처 생활조정수당, 복지부 노인일자리아사업, 국토부 공공분양주택사업, 지자체 상수도요금감면사업에 활용할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추가로 구축(12.6일)
 - * 복지 대상자와 급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·연계하여 중앙부처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, '13.2월 구축되어 17개 부처 292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
 - 이를 통해 명확한 대상자 선정, 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 국민 편의성 향상이 기대
 - * 예) 공공분양주택사업: 제출서류(3~5종→1종), 조사기간(1~2주→3일)
 - 앞으로도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정보연계를 지속 확대해 갈 예정
- (평가 및 과제) 국민을 중심으로 한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기대
 - 향후 정보연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,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,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업 등이 중요